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 시점 2026. 11. 19.(목) 12:00 (2026. 11. 20.(금) 조간) 배포 2026. 11. 19.(목) 09:00

과기정통부, 생활현장 밀접형 전파규제 3건 개선

- 지표·벽투과레이다 이용기준 신설로 싱크홀 탐지·시설물 점검에 안심하고 사용 -
- 10.5㎓ 물체감지센서의 실외 허용으로 출입감지·스포츠 궤도 추적 등 활용처 확대 -
-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자 보호조치 연장, 디지털 전환은 강화 -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지표·벽투과레이다 이용기준 신설, 10.5㎓ 물체감지센서 실외 이용 허용,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연장을 위한 무선기기 기술기준* 개정을 마치고 11.19(목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「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」, 「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」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

이번 개정은 **지난 9월**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**「산업·생활·안전 분야 현장 체감 전파규제 개선 추진」의 후속 조치**로, 행정예고(10.13.~11.3)를 거쳐 확정되었다. 새로운 무선기기가 산업·생활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이용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, **이용자 불편은 줄이고 전파 혼·간섭 없이 안전하게 이용**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다.

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째로, **지표투과레이다(GPR)와 벽투과레이다(WPR)**의 이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. 해당 무선기기는 전파가 물체를 통과하거나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땅 속이나 건물 벽면처럼 **눈으로 볼 수 없는 내부 구조물을 찾아내는 장비**로, **싱크홀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점검 현장**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. 이번에 주파수 대역별 출력과 이용 기준이 마련되어 탐지 성능은 충분히

확보하면서도 다른 무선기기에 혼신을 주지 않도록 하여, **늘어나는 레이다 이용 수요에 대응**하면서 **안전한 이용 환경**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.

둘째로, 실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**10.5㎓ 대역 물체감지센서**를 **실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개선**하였다. 해당 센서는 전파를 이용하여 물체 움직임을 감지하는 무선기기로, **건물 출입 감지나 골프·야구에서 공의 궤도 추적**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. 그간 10.5㎓ 대역 물체감지센서는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**무선전송링크용* 무선국과의 혼·간섭 우려 때문에** 실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크게 줄어 **혼신 우려가 낮아진 만큼** 10.5㎓ 물체감지 센서의 **실외 이용이 허용**되었다. 이에 따라 이용자는 **실내외 관계없이** 용도와 환경에 맞는 대역의 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.

*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 : 방송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중계소로 전송하는 용도

셋째로, **아날로그 생활 무전기**의 **이용기한**을 **2026년 12월 31일**에서 **2032년 12월 31일**까지 **6년 연장**하였다. **400㎒ 대역 생활 무전기**는 통화품질 및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**2015년부터 디지털로 전환**해 왔으며, **2024년부터는**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의 **신규 제조·수입·판매가 금지**되었다. 그러나, 제조·수입·판매 금지조치 **직전에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를 구매한 이용자**는 **이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**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,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**기기 내구연한(9년, 조달청 고시)을 고려**하여 이용 종료기간을 연장함으로써 **기존 이용자를 보호**하기로 하였다.

다만, 디지털 전환 정책은 강화한다. 이미 제조·수입·판매가 금지되었음에도 이용 종료기간이 정해진 아날로그 생활무전기가 계속 유통될 경우 **이용자 피해가 확산**될 우려가 있어, **새로 제조·수입·판매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유통에 대한 적발·단속은 강화**할 방침이다.

과기정통부 **이현호 전파정책국장**은 "이번 규제개선은 **무선기술의 발전**과 **현장의 목소리를 반영**하여 **전파 이용 질서는 지키면서 과도한 제약은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**"이라며, "앞으로도 **안전한 전파 이용 질서**를 확보하면서

산업과 생활 속 새로운 무선기술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**국민 체감형 규제개선**을 꾸준히 추진하겠다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창묵 (044-202-4940)
		담당자	사무관	황지선 (044-202-4929)

대체불가 대한민국
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·AI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